

“차별금지법과 같다”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 촉구

제주도청 앞에서 폐지 위한 도민연합집회 열려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가 지난 11일부터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도민연합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거룩한방파제와 거룩한방파제 폐지국토순례단, 그리고 거룩한방파제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이외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헌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하지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그 취지와 달리 특정 가치에 치우친 내용과 절차적 정당

성의 결여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며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다.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사유로 적시하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진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러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는 ‘동

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라며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장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다른 집단의 권리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 또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여 분열과 갈등을 만들게 된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무질서와 폐습을 버리고 자율과 조화를 추

구하는 헌법정신과 충돌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 충돌하는 나쁜 헌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청회 또한 절차상 흠이 있는 공청회였다”,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해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는 가짜인권과 가짜평화로 개인의 삶, 가정과 교회, 국가와 사회를 혼란케 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다르지 않다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도민연합집회가 열린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대구 할랄 클러스터 조성, 이슬람 특혜 우려”

군위이슬람할랄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 세미나 개최

대구시의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이 정교 분리 위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군위이슬람할랄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가 군위군 부계제일교회에서 개최한 이슬람할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다.

지난해 8월 대구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억을 투입해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할랄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해 현재 5곳뿐인 할랄인증 업체를 2028년까지 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장에 맞춰 군위군 소보면 인근에 예산 22억을 투입해 할랄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만석 목사(무슬림 선교훈련원장·사진)는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할랄제도를 국민 형제로 지자체가 앞장서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를 위배한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이라고 했다.

박상훈 변호사(범무법인 우리들)는 “할랄인증은 한국이슬람교(KMF)-한국할랄인증원(KHA) 주도로, 할랄인증 비용지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특정 종교특혜 우려도 제기된다”며 “국가나 지자체는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고 했다.

202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에 따라 현지 농식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할랄인증 취득 비용의 최대 70%(인증당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정부 및 지자체의 할랄산업 지원정책에 따라 할랄인증을 주도하는 한국이슬람교의 종교적 영향력 확대 혜택 등 할랄인증의 유·무형 이익이 이슬람 관련 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대구시의 할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인 이슬람 율법에 운영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한국 법체계와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만석 목사는 “할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돼지를 금기 식품으로 여기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반경 5km 내 돼지고기 판매가 금지되고, 돼지 도축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상훈 변호사는 “할랄 도축장 운영 요건은 현행법상 재산권 및 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할랄인증을 받게 된 기업에서 이



세미나가 진행되던 모습. ©주최 측 제공

전부터 근무해 온 비무슬림 종사자는 무슬림 종사자 근무 및 사리아 규율 준수를 요구하는 할랄 도축 과정에서 직업 선택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고 했다.

할랄 도축법을 두고 동물학대 비판도 제기됐다. 이만석 목사는 “소고기 할랄 인증은 이슬람의 도축법인 ‘다비하(Dhabiha)’ 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즉 도축 시 무슬림만 참여하고 짐승을 죽일 때 그 얼굴을 메가 방향으로 돌려야 하며, 알라의 이름을 외치면서 혈도와 기도를 끊어야 하고, 도축된 고기는 거꾸로 매달아 피를 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소 도축 시 고통 없이 죽이는 전기충격 방식이 이슬람에서 금지되고 있어, 할랄 인증에서 ‘다비하’ 도축법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덴

마크, 스웨덴 등에서는 동물학대 혐의로 금지되고 있다”고 했다.

박상훈 변호사는 “할랄의 도축방식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슴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요구하며, 도살과정에서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겪선 안 된다고 명시한 것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다.

이날 축사에서 이창호 이창호 대구할랄산업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대구시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할랄 인증 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없는 법이며 국민 형세를 용도를 잘못하고 있는 종교 편향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동성결혼 법적 허용’ 반대 50% 찬성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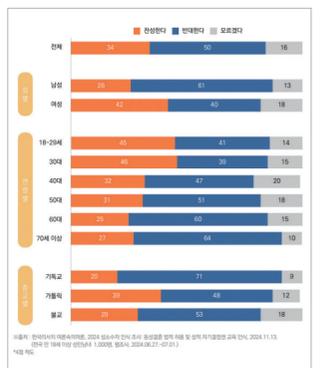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리서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소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한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50%, 찬성이 34%로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를 19일 소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7월 1일 진행했다.

목데연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남성, 60대 이상, 기독교인의 경우 동성결혼 법적 불가 인식이 강했다”며 “모든 변수 중에서 기독교인의 동성결혼 반대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다”고 했다.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유지해 온 가족, 가정의 의미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가 27%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21%), ‘아동, 청소년의 성장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15%) 등의 순이었다. 이를 종교별로 보면 3대 종교 중 기독교만이 신앙·종교의 관점에서 옳지 않아서(29%)를 가장 높게 꼽았고, 천주교와 불교는 ‘가족, 가정의 의미에 혼란 우려를 각각 1위로 꼽아 종교별로도 인식 차이를 보였다.

동성결혼 찬성 이유로는, ‘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서’(8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다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관한 의견 (2024.%) ©목회데이터연구소

음으로 ‘모든 사람이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20%), ‘동성 커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13%) 등의 순이었다.

김진영 기자

낙태법 공백 장기화... '생명경시 풍조' 우려 >> 3면

"감탄할 만한 성과대로 만들 수 있는 요인" >> 22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비교불가 혜택!

Premium Golf

제주 36홀 명문 골프장 무기명 골프 혜택

년 24회 4인 그린피 무료 + α

DL이앤씨(舊 대림산업)가 시공한 제주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

하이엔드 리조트와 명문 골프장을 하나로!

방문 상담 고객 1박 무료 숙박

www.teddypalace.net

TEDDY PALACE

파격 1억대!

총 190세대

26세대 단독형 (271m) | 116세대 빌라형 (182m) | 48세대 빌라형 (207m)

분양문의 1811-0313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로 34번길 204
시공사 IDI E&C 신탁사 KB부동산신탁